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담당 기자
발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문 의	홍현재 조직차장 (02-2269-6161)
제 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하라!〉 기자회견**

공공돌봄 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하라!

○ 개요
- 일시 : 2025년 8월 5일(화) 10:0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여는 발언 ¦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 연대 발언1 ¦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 연대 발언2 ¦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현장 발언1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 현장 발언2 ¦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요양보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1.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작년 7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후 두 달 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이하 돌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계획은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서사원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을 야기하고,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사원 운영 종료 후 1년이 지난 지금, 돌봄 계획의 축소된 목표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사원을 졸속 폐지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3.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에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과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편차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추진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별로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을 모두 설립 및 운영하고, 전국적인 공공 돌봄을 확충을 촉구하는 기

자회견을 위처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1 : 기자회견문
※ 첨부1-1 : 발언문
※ 첨부2 : 단체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 촉구 성명서 모음

[첨부1]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직접서비스 제공 의무화로 공공돌봄 강화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초기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란이었다. 민간주체가 수익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서비스 불안정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와 공공 직접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설립 여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졌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외에는 지역 지원은 미미해 지역별 운영격차가 생겼으며, 일부 지자체는 초단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로 예산을 투입하여, 소속 돌봄 노동자 전부를 월급제로 고용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한 사례였다. 코로나19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정치인과 민간기관의 압력에 2024년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영역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만 감당'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쇄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를 발표했다. 기존 기관에 업무를 가중해 민간에 연계하거나, 이름만 바꾼 것일 뿐,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이후 1년, 서울시의 계획은 성과는커녕 문제만 드러나고 있다.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겠다며 설치·운영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서울시가 적합하고 신속하다고 홍보한 '안심돌봄 120'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는 1년, 공공돌봄의 필요성은 서울시민이 체감한다. 여전히 서울시민은 돌봄재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원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공적 자금 투입과 국가정책 변화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2025년 8월 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첨부1-1] 발언문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서울시에서 공공 돌봄이 사라진 시간이며, 이용자에게는 불편과 고통이, 노동자에게는 해고와 생존의 위협이 밀려든 시간이었습니다
돌봄노동자는 불안정한 민간 시장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쌓아 올린 공공 돌봄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조례 복원과 안정적 예산 확보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공돌봄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착취적 구조속에서 고통받았던 돌봄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만들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며, 공공기관을 민간과 경쟁시키고, 급기야는 시장 논리로 판단하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는 서사원을 폐원시켰습니다.

공공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필요한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완결한다는 목표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간 업자들과의 충돌을 이유로 직접서비스 제공이 제외 된 재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엔진 없이 껍데기' 만 조립해 놓고 달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을 빼고 타협하겠다는 발상은 돌봄을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외면하고 정치적 계산과 민간의 반발에 굴복하는 공공돌봄의 복원을 시민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과 민영화의 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민의 정당한 대표일 수 없습니다.
그 첫 걸음이 서사원 복원이며, 전국 사회서비스원 완결입니다.
'돌봄' 은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권리이며, 공공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사회적 존엄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강화' 를 촉구합니다.

[첨부1-1] 발언문

오대희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작년 7월 31일, 서울시는 공공 돌봄을 책임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강제로 해산해 모든 돌봄사업이 종료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공공돌봄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고, 시민들은 믿고 이용하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잃은 채 민간으로 강제로 떠밀렸습니다.

서사원 폐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났지만 민간 돌봄 현장의 열악한 구조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돌봄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서비스가 없는 불안정한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정, 취약 노인, 단시간·장거리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더 큰 돌봄 공백과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까지 운운하고 있지만, 그 결과 돌봄 공백과 서비스 불안정, 노동권 축소우려는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효율'의 실체입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민간에 떠넘긴 결과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가정, 취약 노인, 긴급 돌봄, 24시간 지원 등 공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책임진 유일한 직접 서비스 기관이었습니다.
돌봄 노동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숙련도를 높이고, 이동시간 보장·교육·상담·병가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돌봄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예산 효율성과 민간 영역 위축을 핑계로 공공 돌봄을 파괴했습니다.
대신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포장한 '안심돌봄120'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회선을 빌려준 정도"라고 평가할 만큼 시스템은 준비조차 되지 않았고, 사회복지 경험이 없는 상담사들이 짧은 형식적인 교육만 받은 채 복지 상담 업무를 떠맡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복잡한 복지·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돌봄이 절실한 이들은 전화조차 걸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돌봄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돌봄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서사원 해산 이후 내세운 '공공돌봄 강화 계획'들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고, 실효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서사원지부 조합원들은 안정된 월급제 일자리를 잃고, 시간제·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로 쫓겨났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실업 상태이거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사원처럼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없어 삶이 불안하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서사원 이용자들이 여전히 우리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돌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간 돌봄이 안정적이었다면 왜 해고된 노동자에게까지 연락을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말하는 ‘공공돌봄 강화위원회’는 민간 위탁 중심으로 운영돼 투명성도, 실효성도,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불안정한 서비스에 내몰리고, 돌봄 노동자는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즉각 재설립하라!
공공이 직접 돌봄을 책임져야 시민도, 노동자도 안전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의무 설치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라!
돌봄 공공성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흔들리는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된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장해야합니다.
불안정한 단기·시간제 노동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정적 공공 돌봄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존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서사원을 되살리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완성할 때까지,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사원 공공 돌봄을 되살리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완결하라! 투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종료·집단 해고 1년

- 우리는 다시 공공돌봄을 세우고 안정된 공공 직접운영을 요구한다

1년 전 오늘, 서울시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해온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해산해 공공돌봄을 중단시키고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서사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 시기에 긴급돌봄지원,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사례서비스, 돌봄SOS, 틈새돌봄, 24시간 긴급지원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을 메운 유일한 직접 서비스 기관이었다. 그러나 시민의 90% 이상이 공공부문 돌봄 강화를 지지했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와 시의회는 조례를 폐지하고 졸속으로 해산을 강행해 그 역할을 중단시켰다.

서울시가 내세운 민간 연계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이미 민간 중심 돌봄 이용자들은 서비스 중단과 대기, 불안정한 서비스와 돌봄 공백을 경험했다. 특히 장거리·단시간(회기)·환경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정이나 취약 노인가구 등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은 오히려 돌봄 접근과 지속성이 더 어려워졌다.

돌봄노동자들 역시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민간기관으로 흩어져 시간제·저임금 노동으로 전락했다. 공공운영에서 보장되던 교육·처우·안정성·이동시간 등 은 사라지고 실질적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 같은 문제까지 확산되었다.

해산 이후 집단 해고된 돌봄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한 단기·시간제 일자리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 근무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해고 돌봄노동자가 구직 중이거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저임금·시간제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로 재취업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는 생계 때문에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한 조합원은 “서사원에서처럼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없어 삶이 너무 불안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민간기관에서 원하는 시간대가 아닌 하루 몇 시간 일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 임금이 너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다시 공공돌봄노동자로 시민 곁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강화를 명분으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으나 실제 진행과정, 실효성,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재설립이나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이용자들은 민간기관으로 강제 연계되었고 돌봄노동자들에게는 구직 정보 안내만 제공되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화 추진계획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폐지되었던 공공돌봄을 돌봄의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려는 신호이자 공공돌봄기관의 전국 확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화를 국정 과제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설치 의무와 핵심사업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국 사회서비스원 확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돌봄의 국가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정부가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계획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립은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핵심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 즉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설립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0월에 준비 중인 서울시 돌봄정책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재설립 과정과 서비스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 해고로 실업과 저임금, 불안정고용 상태에 방치된 돌봄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돌봄노동자 직접 고용과 안정적 일자리 회복이 시급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돌봄 기관이 아니다. 시민의 돌봄권과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동시에 지키는 공공돌봄 사회안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약속했던 공적 돌봄기관 전국 확장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의 적기이다.
우리는 공공돌봄을 복원하고 시민의 보편적 돌봄 권리와 돌봄노동자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7. 3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이제는 직접운영 공공돌봄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7월 31일,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공공돌봄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강제 폐원시키며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주도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산 삭감과 조례 폐지는 시민 90%가 지지한 공공돌봄 강화 정책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였다.

폐원 1년, 그 참혹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돌봄은 예고된 대로 공공성과 연속성을 잃었고, 시민의 돌봄권과 노동자의 생존권 모두가 크게 후퇴했다. 서사원에서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과 노인들은 폐원 이후 서비스 중단, 대기 등의 돌봄 공백으로, 돌봄노동자들은 민간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용불안으로 내몰렸다. 공공돌봄의 공백은 민간 영역의 서비스 불안정성과 질 저하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화를 포함한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기관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 복원과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 돌봄권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복지 인프라로 설계해야 한다.

서사원은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다. 민간 영역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돌봄 전담기관이었다. 서울시는 폐원으로 인해 악화된 돌봄 공백과 노동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을 실질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공공돌봄 포기 선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복원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재설치되는 서사원이 단지 중간지원조직이나 관리·감독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간 위탁으로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동청소년돌봄 등 복잡하고 연속적인 서비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돌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돌봄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공공이 책임지고 직접 제공하는 돌봄의 양적 확대만이 돌봄의 질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실현할 수 있다.

셋째, 2026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며,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보편적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직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합돌봄은 지역 내 공공인프라, 특히 공공직접서비스 제공 주체의 존립 없이는 불가능한 과업이다. 민간돌봄을 중심에 둔 지역사회통합돌봄는 기존 서비스를 그럴듯한 포장지로 바꾸는 일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만이 홀로 역주행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핵심 제공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 즉시 재설치 계획을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의회는 조례 복원과 안정적 예산 확보로 공공돌봄 복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를 즉각 복원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돌봄은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을 초월한 시민의 생존권 문제다.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킨 조례 폐지는 반드시 되돌려져야 하며, 안정적인 운영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무책임한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책임을 되살릴 것인가. 돌봄은 시장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삶의 권리다. 우리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서사원 재설치에 나서고, 2026년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 공급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돌봄은 시민의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을 시장에만 내맡길 수는 없다. 공공돌봄이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있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족을 맡기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시의 공공돌봄 복원에 끝까지 나설 것이다.

시민의 돌봄 요구와 돌봄노동자의 준엄한 외침 앞에서, 서울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공공돌봄 파탄의 상징,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재설립을 촉구한다!

1년 전 오늘은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을 해산시키고 공공돌봄의 파산을 선고한 날이다. 수백 명의 돌봄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렸고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취약 계층 이용자들에게는 불안정한 서비스와 돌봄 공백을 초래했다.

이미 확인된 것처럼 서사원은 공공돌봄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민간기관이 수익성이 낮거나 서비스 강도가 높아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도 충실히 수행했다.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았던 시민들이 공공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절절하게 증언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서사원을 폐지했다. 하지만 서사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다. 서사원 해산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어처구니 없는 처방이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서사원 폐지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민간 중심 돌봄을 강화하는 엉터리 계획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민간 기관으로 강제 연계하고 돌봄노동자들에게는 구직 정보만 안내하는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 수반되었고 제도적 보완은 없었다. 잘못된 처방에 뒤이은 후속 조치마저 헛다리만 짚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는 공공돌봄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천박한 관점에서 비롯한 예견된 참사나 마찬가지다.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는 공공돌봄 강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서사원을 재설립하는 것이 공공돌봄 강화의 출발이고 후퇴한 공공돌봄을 복원하는 유일하고도 실효성 있는 방법임은 이미 확인되었다. 마침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을 추진하고 서사원 재설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공돌봄 파탄의 상징이 된 서사원을 재설립하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민간 업자들과의 충돌을 이유로 직접 서비스 제공은 제외한 재설립 추진 구상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시대적 요구인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직접 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서, 시민의 돌봄권과 돌봄노동자의 존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서사원 재설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7월 3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을 무시하고 서사원을 해산한 서울시에게 고한다!

바로 오늘, 2025년 7월 31일은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해산된 지 1년되는 날이다. 서사원의 해산의 원인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후퇴와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에 있다.

서사원은 아동 보육, 노인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직접 돌봄 노동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서울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였던 기관이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서사원의 해산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해고를,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성 실천의 중요성을 짓밟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시민들의 존엄과 생존권 무시하고, 사회복지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폭거이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는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가 무너진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재건하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지자체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5. 7. 3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돌봄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2024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단 1%의 공공돌봄을 수행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고 해산 시켰다. 4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을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의 적이 되었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원 하나가 없어진게 아니라 공공돌봄을 내팽겨쳤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와 서울시 오세훈시장이 외면한 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제대로된 돌봄 받을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한다.

이재명 정부는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완결 계획을 보고 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재설립 되어야 하고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당연한 절차이다. 공공 돌봄기관 설립은 기본이고 좋은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고용안정, 최소 노동시간 보장, 인력기준 개선, 아프면 쉴권리 보장,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노동자 월급제 등은 21대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결단해야 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계획을 세우고 방치된 돌봄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돌봄노동자 직접 고용과 안정적 일자리를 회복해야한다.

돌봄은 소수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권리다. 의료연대본부는 존중받는 돌봄과 돌봄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돌봄 국가책임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윤석열과 오세훈이 무너뜨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건하고, 사회서비스원 의무설치 법안 제정하라!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강제 폐쇄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공공 돌봄의 최전선에서 가장 모범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서사원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수익성이 낮다'는 황당한 이유로 서사원을 해산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공 돌봄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사원 문제와 관련, 이제 내란 잔당 격인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세워낼 것을 촉구한다.

서사원은 지난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어 돌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민간의 외면으로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시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오세훈의 서울시장 재선과 윤석열 집권 후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돌봄의 시장화를 끊임없이 획책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다. 이는 공적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 공공 돌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에 대한 폭거였다. 서울시는 서사원을 폐지한 후 소위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민간기관으로의 이용자 강제 연계, 해고된 서사원 노동자들에게 구직 정보나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공적 돌봄을 담당하던 서사원에 '수익성'을 들이대던 저열한 사고방식이 그 후속 조치마저 돌봄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졸속행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얼마 전 한 언론사는 "복지부, 17개 시도사회서비스원 완결화 추진…尹 축소 정책 뒤집는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을 포함하여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사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확대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공 돌봄 서비스의 공급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증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내란과 그에 맞선 시민들의 강고한 투쟁의 결과로 탄생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자행했던 내란과 비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의 회복이다. 윤석열과 오세훈이 무너뜨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세우고, 전국의 사회서비스원들이 공공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천만 서울 시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건하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무엇이 남았나?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의 주변적 의제였던 돌봄노동이 코로나 19 이후 뜨거운 사회적 쟁점의 중심이 되었다. 2019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문을 열고 5년 만에 폐원, 1년이 지난 지금, 공공돌봄의 상징이었던 서사원이 이용자와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를 돌아보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돌봄과 노동은 각각 어떻게 돌봄 공백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크게 후퇴하게 됐는지는 급박하게 서사원 폐원이라는 결정을 밀어 붙인 오세훈 서울시의 반민주적 정치적 폭거만큼이나 파괴적 결과로 나타났다. 이 일은 집 안에서 고통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돌봄을 정부와 지자체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로 받아 안고 공공돌봄이라는 사회적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사원의 역할과 잠재력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으로 돌봄의 사회적 통합력을 스스로 해체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서사원의 폐원이 서사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외형만 갖춘 채, 계약직의 남용 등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공적돌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화를 위한 계획이 논의된다고 한다. 이제는 공공돌봄의 뼈대를 서사원복원으로 다시 세우고, 공공돌봄의 실질적이고 통합력있는 돌봄 서비스제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한다.

서사원을 다시 복원하기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들이 긴급히 필요하며,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공공 인프라 확충계획 및 통합돌봄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전일제 방식의 안정적인 인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마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구체적 현실을 개선해 나갈 공공돌봄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이후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선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확대강화돼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없거나 부유한 채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춥고 뜨거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돌봄도 문명도 아니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1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새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정부 직접제공, 활동지원사는 월급제로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실현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8년.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의 대명사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에 섰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장애인 13만, 노동자 12만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주고 받는다. 예산이 2조5천만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인데도 장애인은 아직도 서비스가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한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노동감시에 여념이 없다. 시장에 맡겨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실체다.

장애인의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노동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해고의 불안을 안고사는 노동자에게 충성을 기대할 수 없다. 바우처가 갖고 있는 한계다.

관공서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서비스제공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과 바우처 사용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활동지원기관에 손해가 나면 기관은 서비스제공을 거부한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도 민간위탁기관의 수익 앞에서는 무력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고용불안은 노동관계법이 무색하다. 활동지원사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용자가 거부하면 대책이 없다. 21세기 민주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활동지원사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저임금은 활동지원사를 장시간 노동자로 만든다. 활동지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노동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최저시급 노동자가 활동지원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장시간노동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감시 또한 가혹하다. 바우처는 수급자와 제공자의 담합으로 부정사용이 쉬운 구조다. 정부는 '바우처 말고 월급제'로 부정수급 해소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부도 민간위탁기관도 쓰기 쉽고 버리기 쉬운 바우처 노동자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의 공급불안,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시민사회의 투쟁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출발했지만 부실한 법으로 인해서 지금은 존재조차 미미하다.
예산 없는 사업은 허구다. 사업설계부터 노동자 고용까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운영의 확장은 꿈에 불과하다. 사업수탁을 민간과 경쟁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와 의회까지 민간위탁기관 눈치보기에 바쁜 상황이니 적극적인 사업은 기대하기도 힘들다.
그나마 규모있게 운영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세훈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합세하여 문을 닫았다. 법률적인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운영은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새 정부에 우리는 요구한다.

- 사회서비스 공공운영 비율을 30% 이상 확충하라.
- 정부는 노동자 월급제로 직접고용하고 서비스 직접제공 시행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지급하여 노동권 보장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립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노동안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하라.

2025.8.1.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